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2·3 내란 1년’李 대통령 특별성명 “친위 쿠데타 가담자 엄벌 통합 이유로 타협 않겠다”

‘완전한 내란 청산·극복’ 강조
재발방지 위한 책임·대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을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극복’을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가 ‘친위 쿠데타’ 성격이었던 만큼, 가담자를 모두 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나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 역시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모두 정리해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뜻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빛의 혁명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과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이는 ‘통합’을 이유로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척결하지 않는 것은 ‘봉합’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잔재 청산 과정을 ‘치명적인 암 치료’에 비유했다.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수술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과정은 아픈 곳 또는 끓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한다.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을 이유로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세력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하지만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며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당히 미봉해 놓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있었던 내란 사태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게 12·3 내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부 내 ‘헌법준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설치를 두고 야권에서 ‘공무원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가하는 데 대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진압 과정이라고 해야 한다. 지난 일을 과해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사안을 진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및 시민사회에서 강력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韓 배터리 정책, 대부분 ‘재탕’ ‘兆 단위 투자’ 中 대응 위기감

中 투자공세로 차세대 기술 속도
韓 기존사업 중심 지원 한계 부각
정부·기업 근본적 투자확대 필요
현장선 세제·규제 완화 목소리

정부가 향후 4년간 약 28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새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지난 2023년부터 이어져 온 기존 사업이 대거 포함된 만큼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중국이 조(兆)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앞세워 전고체·나트륨이온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어 한국이 기술 격차를 좁히기에는 한층 더 불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제시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밝힌 2800억원 투입 계획에는 이미 2023년부터 추진돼 온 차세대 배터리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만 해도 2023~2028년 동안 1800억원이 배정돼 있으며,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리튬금속·

리튬공기·나트륨 등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에도 97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성능·안전성 평가와 전극 장비·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에 약 8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 역시 2022~2030년 장기 과제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2800억원은 새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5년짜리 과제들을 통칭해 적은 것”이라며 “전고체·리튬금속 등 기존 사업의 연차 예산에 더해 올해 시작된 과제들도 있고,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유사 과제 두세 개까지 합쳐 전체 규모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사업은 이미 연도별 계획이 확정돼 있어 신규 금액만을 따로 추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제시된 수치는 2029년까지 예정된 투자 기준일 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향후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규모가 내년부터 새로 투입되는 재원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과제와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 포함된 총액에 불과해 일부에서는 총량적 측면에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격차를 좁히기에는 부족한 규모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터리 삼각 벨트’ 구상도 공급망 기반 확충 차원에서의 의

미가 있으나, 이를 기업의 투자 확대나 생산능력 확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규제 정비 등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핵심 광물 중심의 국내 밸류체인 구축 자체는 취지가 좋지만 실제 가시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세제와 규제 같은 구조적 요소”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만 지난해 60억 위안(약 1조2450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투자로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전고체·나트륨이온 등으로 경쟁 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 중국의 이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향후 기술 판도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조 단위로 움직이고 있지만 한국의 투자 규모는 여전히 작다”며 “차세대 배터리는 투자 규모가 기술 확보 속도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근본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野 반발 속 ‘반도체특별법’ 연내 입법 청신호

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주52시간 면제는 빠질 듯

여야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합의된다면 9일 본회의 처리도 노릴 수 있다. 업계가 염원하던 반도체특별법 연내 입법화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설치비용 지원,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중소·중견 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반도체특별법 논의 초기, 국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 형식의 재정을 투

입하는 ‘직접보조금’ 논의가 활발했으나 일부 부처의 반대와 산업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법안에 담기지는 않았다. 최근엔 국민의힘이 이른바 반도체 기업의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를 면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우회로를 만드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며 반대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을 계속하자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상임위 논의 기간이 지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부의 된 상태다.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산자위에서 막판 협상 중이다. 산자위에서 합의만 되면 9일 본회의 처리까지 노릴 수 있다. 여야는 9일부터 본회의를 여는 안을 합의 중에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고소득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특별법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여당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유연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식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별법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 규정을 담은 조항도 국제통상리스크를 고려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산자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보조금 정책 등이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적용돼 다른 회원국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반발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반도체특별법은 가장 핵심인 ‘화이트칼라 이그제션’, 즉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이 빠진 ‘팔소 없는 쥘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유병호 “감사원 쇄신TF, 표적 조사…7개 감사 모두 적법·타당”
▲윤한홍 정무위원장, 쿠팡 현안질의서 “김법석 불출석 강한 유감” /사진 뉴시스

▲與, ‘인사청탁 의혹’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데 이견 없어”
▲제주도만 12·3계엄 때 적극 대응… 대부분 지자체 ‘팔짱’

▲외교2차관 “인도적 협력, 北주민 삶에 변화 줄 현실적 방법”
▲내년 국방비 7.5% 증가한 65.8조원… 국회 심의서 4000억원 감액